

서울특별시 성동구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 6. 28.

복 지 건 설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 5. 4. 고용필 의원

나. 회부일자: 2023. 5. 30.

다. 상정일자: 2023. 6. 22.

(제273회 제1차 정례회 개회 중 제8차 복지건설위원회)

2. 제안개요

가. 제안설명: 고용필 의원

나. 제안이유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저출산에 따른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고 결혼에 대한 가치관 정립과 건강한 결혼 문화 정착을 위해 결혼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으로써 결혼과 가족에 대한 합리적 가치관을 확산시키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주요내용

가. 목적 (안 제1조)

나. 구청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2조~제3조)

다. 시행계획의 수립 및 결혼친화환경 조성사업(안 제4조~제5조)

라. 기업·단체 등 지원 및 홍보(안 제6조~제7조)

마. 협력체계 구축 및 표창(안 제8조~제9조)

바. 시행규칙 (제10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건강가정기본법」

나. 협조부서: 여성가족과

다. 예산조치: 성동구청장과 협의

라. 입법예고(2023. 5. 19. ~ 24.)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5.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

가. 제안 취지

- 본 제정안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저출산에 따른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고 결혼에 대한 가치관 정립과 건강한 결혼 문화 정착을 위해 결혼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결혼과 가족에 대한 합리적 가치관을 확산시키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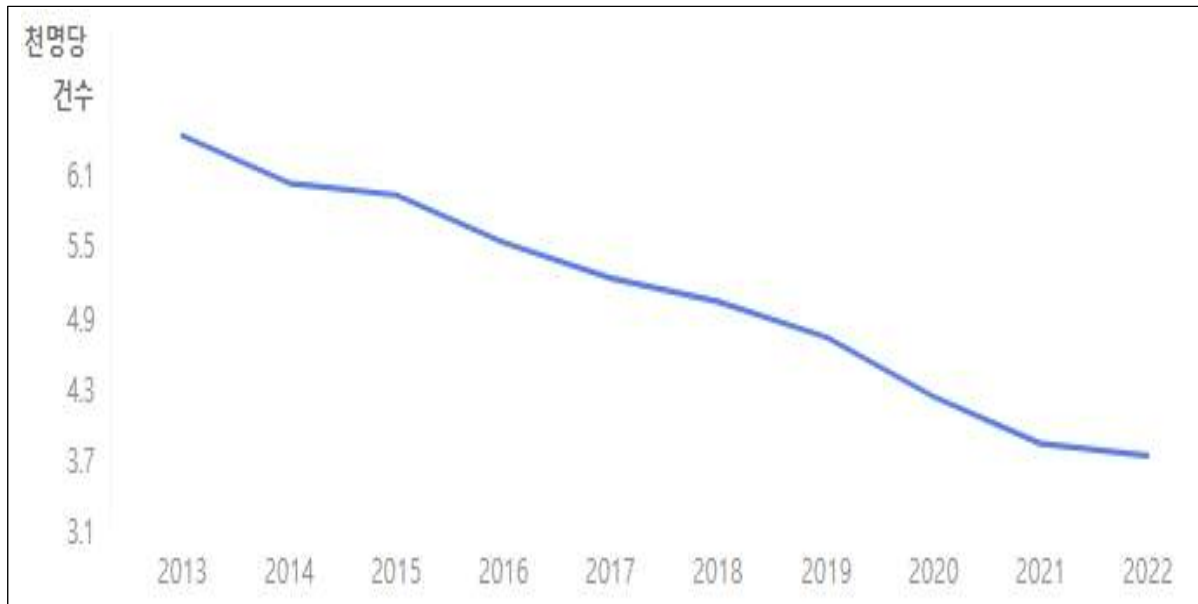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보도자료(저출산·고령사회 정책 과제 및 추진 방향, '23. 3. 28.)에 따르면 '22년 합계출산율 0.78명, 출생아 수 약 24만명으로 한 세대 전 '91년(합계출산율 1.71명, 71만명)과 비교 시 출산율은 1/2, 출생아 수는 1/3 하락함

- 결혼이 늦어지면서 아이를 갖는 연령이 높아졌고, 결혼을 하더라도 출산을 늦추는 경향이 증가하는 등 혼자 살거나 늦게 결혼하는 사회 분위기가 고착화됨
- (30대 미혼 비중) '90년 9.5%(남), 4.1%(여) ⇨ '20년 50.8%(남), 33.6%(여)
- (초혼 연령) '91년 27.9세(남), 24.8세(여) ⇨ '21년 33.4세(남), 31.1세(여)
- 만혼과 미혼이 저출산의 주요 요인이었으나 최근에는 기혼가구의 평균 자녀수도 감소가 심화됨



- 또한,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혼인건수가 크게 감소하여 향후 2~3년간 초저출산 현상이 지속될 전망이다
- 전년 대비 혼인건수 감소율 '20년 $\Delta 10.7\%$, '21년 $\Delta 9.8\%$ (10년 중 최고치), 결혼 의향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조사됨(보건사회연구원 2022)

< 1)조혼인율 3.7(천명당 혼인건수) (출처: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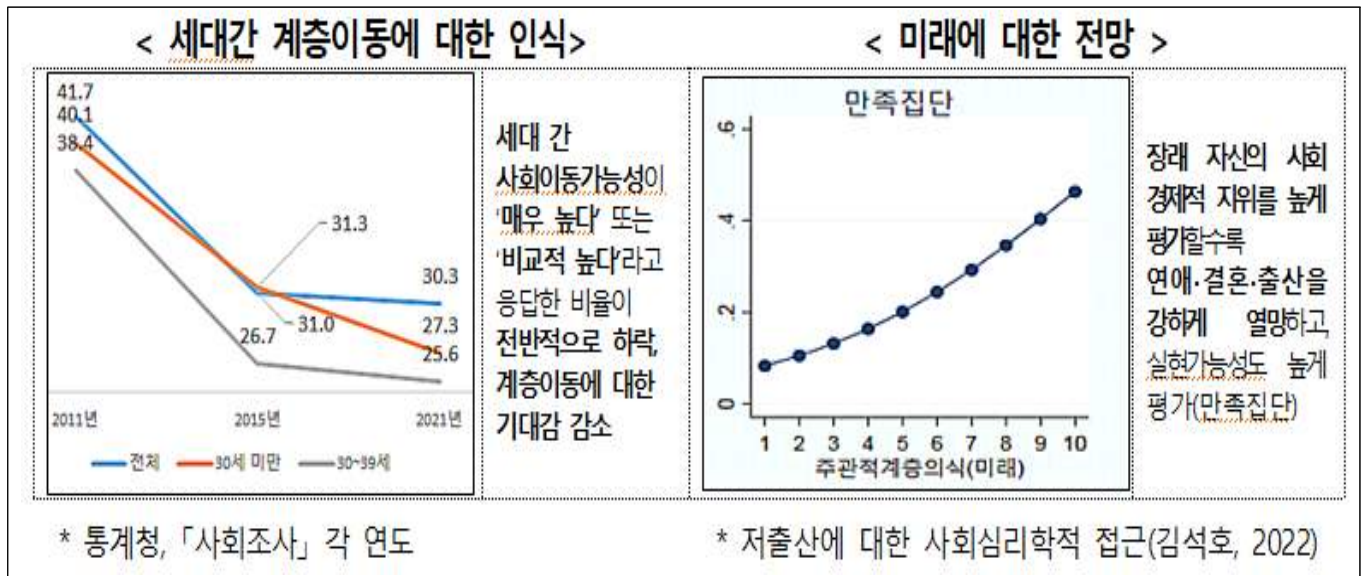
- '21년 퓨리서치센터 '무엇이 삶을 의미있게 하는가' 조사에서 한국 1위는 물질적 풍요인 반면, 대부분의 국가 1위는 가족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나 우리 사회가 초경쟁적인 사회 환경으로, 결혼·출산보다 생존을 더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음

경제 여건과 고용 불안 등으로 취업 준비기간이 장기화되고 고용의 불안정성, 높은 주거비용으로 성인 이행기가 지연됨에 따라 결혼·출산을 포기하거나 지연되는 상황이 이어짐

- 18~34세 청년 첫 일자리의 33.4%가 비정규직
- '20년, 청년 1인 가구의 월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이 31.4%

1) 조혼인율: 1년간 발생한 총 혼인건수를 당해 연도의 주민등록인구로 나눈 수치를 1,000분비로 나타낸 것

아울러, '15년 이후 활성화된 온라인 소통환경이 비교성향을 증폭시켜 세대간 계층 이동에 대한 인식도 더욱 부정적으로 변화됨



나. 주요 제정내용

- 안 제1조(목적)에서는 이 조례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저출산에 따른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고 결혼에 대한 가치관 정립과 건강한 결혼 문화 정착을 위해 결혼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결혼과 가족에 대한 합리적 가치관을 확산시키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였고

<결혼친화도시 조성 조례 제정 현황(출처: 여성가족과 / '23. 5월 기준)>

연번	자치구	조례명	제정일
1	서울특별시 동작구	서울특별시 동작구 <u>결혼친화도시</u> 조성에 관한 조례	2023.03.09
2	완도군	완도군 <u>결혼친화환경</u> 조성에 관한 조례	2023.03.10
3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u>결혼친화환경</u> 조성 조례	2022.04.13
4	전라남도	전라남도 <u>결혼친화도시</u> 조성에 관한 조례	2021.12.23
5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u>결혼친화도시</u> 조성 조례	2021.10.01
6	충청남도	충청남도 <u>결혼친화도시</u> 조성에 관한 조례	2021.02.22
7	대전광역시 서구	대전광역시 서구 <u>결혼친화도시</u> 조성에 관한 조례	2020.08.03

“결혼(혼인)”에 대한 상위법령 관련규정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가정의례(家庭儀禮)의 의식(儀式) 절차를 합리화하고 건전한 가정의례의 보급·정착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조장하여 허례허식(虛禮虛飾)을 없애고 건전한 사회 기풍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가정의례 : 혼례, 상례, 제례, 회갑연 등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

「건강가정기본법」

제8조 (혼인과 출산) ① 모든 국민은 혼인과 출산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모·부성권 보호 및 태아의 건강보장 등 적절한 출산·육아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 안 제2조(구청장의 책무)에서는 구청장이 결혼친화환경 조성
에 필요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명시하였음
- 안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에서는 구청장이 성동구의 여건에
맞는 결혼친화환경 조성을 위하여
 - ▶ 결혼친화환경 조성사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 ▶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주요시책
 - ▶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필요한 추진사업 재원 조달 방법
 - ▶ 그 밖에 결혼친화환경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음
- 정부의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르면 결혼 ⇨ 출산
으로 이어지는 고정된 패러다임을 탈피하여 다양한 가족을 인정
하고 출산한 아이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역사회의
통합 돌봄체계 마련을 강조하였음
- 안 제5조(결혼친화환경 조성사업)에서는 구청장이 결혼친화
환경 조성을 위하여
 - ▶ 결혼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에 관한 사항
 - ▶ 결혼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 부양·자녀양육·가사노동 등에 함께하는 가족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 ▶ 합리적 결혼문화 운동 확산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결혼친화환경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들은 줄어드는 혼인 건수를 늘리기 위해 미혼남녀 만남 행사를 주도하거나 공공예식장을 운영하는 등 초저출산 국가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결혼·출산 장려 정책을 추진하였음

< 서울시 「나만의 결혼식 사업 개요」 (출처: 여성가족과) >

- 사업대상 : 서울시 거주자 또는 생활권자인 (예비)부부
- 운영공간 : 북서울 꿈의숲 등 23개소(신규 19개소, 기존 4개소)
- 운영방법 : 결혼운영 전문업체와 협약체결하여 상담 및 예식진행
 - 서울시 장소 제공, 결혼업체 예식 운영하는 공동협력사업(비예산)으로 추진
 - 결혼식 예약정보시스템 운영(패밀리서울), 상담전화 운영(☎1899-2154)
- 사업내용 : 예식공간 제공 + 웨딩상담·기획 + 예식진행

<서울시와 함께 하는 나만의 결혼식 지원 내용>



- 안 제6조(기업·단체 등 지원)에서는 구청장이 결혼친화환경 조성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 안 제7조(홍보)에서는 구청장이 결혼친화환경에 관한 정보를 대중매체와 구 및 관련 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안 제9조(표창)에서는 구청장이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기여한 기관,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결혼 감소와 출산 기피현상으로 점차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결혼친화적인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부양·자녀양육·가사노동 등을 함께하는 가족문화 확산 등을 통해 건강한 결혼문화 정착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추진시 달라진 결혼관과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체감도 높은 사업을 발굴하여 미혼에서 결혼으로의 이행기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어려움을 공공지원을 통해 일부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임

6. 질의 및 답변요지: 회의록 참조

7. 토론요지: 없음

8. 심사결과: 재석위원 4인 중 찬성 4인으로 원안가결 하였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